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22호
2017. 8. 14

정책동향

- 건설 분야 남북 협력사업 전망
- 공공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제도의 문제점

시장동향

- 6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

산업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 I
-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의 수주 역량 강화 방안

건설논단

- 청년 없는 건설업, 기반이 흔들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 분야 남북 협력사업 전망

-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경제통일 구상의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 남북 협력사업, 정치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후 추진

-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 기반¹⁾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 구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행하여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 제공
 -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
 -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및 접경지역 발전
-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뉘른베르거 재단 초청 연설(2017. 7. 6)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으며,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힘.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함.
 -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및 평화협정 체결 추진
 -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 달성(한반도 신경제지도)
 -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 있게 추진(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 하천 범람 대응, 감염병·산림 병충해 산불 등에 공동 대응 등)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경제통일’ 구상 제시²⁾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2017. 7. 19)하면서 경제통일 중심의 대북 정책을 구체화시킴.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으로 한반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함.

1) 통일신문, 2017. 7. 6.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 7., p. 131.

-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협력 벨트 건설
 - DMZ 환경·관광 벨트: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 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하나의 시장)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 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 공동체를 형성시킴.
 - (경협 재개)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를 조속히 지원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 경협 재개를 추진함.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 (접경지역 발전)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남북 협의를 통한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조성함.

■ 남북협력사업 활성화, 건설기업의 북한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 정부는 남북군사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2017. 7. 17)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7.28)하였음.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초고강도 대북 제재가 결의(8.6)되었음.
- 현재와 같이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고도화된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 간 대화의 물길이 트인다면 남북 협력사업의 활성화는 불가능하지 않음.
- 북한 건설시장에서 우리 건설기업들은 입지적 접근성, 문화·역사적 동질성, 시공의 효율성, 국가적 지원 등의 측면에서 여타 국가보다는 경쟁력이 있음.
 - 북한 지역에 대한 건설투자는 산업단지 조성, 대륙 연계 철도·도로 건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농촌 개발 등 남북한 모두의 이익(win-win)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공공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제도의 문제점

- 불필요한 분쟁 발생 방지 위해 모호하고 발주자 편향적인 제도 개선 시급 -

공공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시 간접비 미지급 사례 여전히 만연

- 건설공사는 특성상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 될 경우 현장 유지를 위해 막대한 공기연장 비용¹⁾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에 공공공사의 경우 지난 1986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시 발주기관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국가계약법령²⁾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연장으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 항목 및 산정 방법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자체 산정기준이나 일방적인 감액 결정에 의해 지급되는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한 소송도 급증하여 2017년 1월 기준, 7대 대형 건설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소송은 43건(청구 금액으로는 3,1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³⁾
- 정부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올 초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 불공정성 논란이 있음.⁴⁾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현행 규정은 그간 지속적인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 (적정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 부재) 간접노무비는 기타 경비 산정의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공종별·기간별 현장 여건에 따른 표준 간접노무 적정인원 기준이 부재하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이견과 부당 감액 발생이 빈번히 발생함.
 - (자율조정 항목 배제)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자율조정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조정은 자율조정이 불가능하고 기재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조정토록 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조정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1) 공기연장 비용이란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함(한국원가관리협회, 2010).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3)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대법원 판결 및 분쟁조정, 중재를 통해 종결된 9건(672억원) 제외.

4) 다만, 새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을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시킴.

- (모호하고 부족한 보상기준) 현행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경비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명시된 비목 이외의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한 생산성 저하 비용, 돌관작업 할증 비용, 공정 변경 비용 등 간접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함.⁵⁾
 - (보상 사유 축소) 기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최근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여 시공사에 불리하도록 보상 사유가 축소됨.
 - (일반관리비와 이윤 보상기준 제외)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는 총 공사원가의 약 9%를 차지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위배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과도 상이함.⁶⁾
 - (불합리한 신청 횟수와 시기 제한)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는 총공사비 조정 신청을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과 상이함. 이에 따라 조정신청일 이후 발생한 공기연장 사유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이 예상됨.
- 또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괄계약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조정신청의 시기, 간접비 채권 소멸시효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하급심마다 다르게 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리 확립이 시급함.⁷⁾

■ 업계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선과 발주기관의 인식 전환 필요

- 공기연장 간접비는 건설업계에 있어 해묵은 숙제이나, 그간의 개선 노력들은 대부분 행정 편의주의 및 사업비 절감 차원의 접근이 대부분이었기에 업계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관련 규정 개선 추진과 함께 무엇보다 소송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업계가 받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인식 전환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 개발이 필요함.

전영준(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5) 이 외에도 실비산정 경비는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요율산정 경비의 경우 ‘간접노무비×산출내역서상 요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가 낙찰 현장일수록 실비와의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등의 경우 실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율산정 경비로 편입하고 있어 불합리함.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기연장 간접비 계상 시 ‘연장기간의 실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연사유 발생 기간 동안의 실비’보다는 대부분 적은 금액이 산정될 수밖에 없음.

6) 이에 따라 감사 등으로 인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발주기관의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근거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증액시와 달리 감액시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위배됨.

7) 이 외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연장에 따른 기타 계약금액 조정은 서로 다른 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시 ‘간접비포기 협약서’ 제출 요구를 통해 간접비 청구를 제한하거나, 휴지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공기연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발주자 불공정 행위 또한 제도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

6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

- 공공부문과 토목은 양호했으나 민간부문과 건축이 부진 -

6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비 0.4% 줄어들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이 양호했으나 민간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국내 건설 수주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4.2%, 17.9% 증가해 2개월 연속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6월에 다시 0.4% 감소하여 3개월 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다만, 수주액 12조 4,600억원은 6월 실적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금액상으로는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공공 수주, 전년 동월 대비 82.5% 증가

- 공공 수주는 모든 공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82.5% 증가함으로써 6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4조 1,140억원을 기록함.
- 토목 수주의 경우 도로와 철도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6월 실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2조 9,305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15.1% 급등함.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3.7% 증가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마감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도 또한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표 1> 2017년 6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6. 6월	12,506.6	2,253.7	1,362.2	891.5	357.9	533.6	10,252.9	974.0	9,279.0	6,146.5	3,132.4
2017. 6월	12,460.0	4,114.0	2,930.5	1,183.6	621.8	561.7	8,346.0	334.3	8,011.6	5,265.6	2,746.0
증감률	-0.4	82.5	115.1	32.8	73.7	5.3	-18.6	-65.7	-13.7	-14.3	-12.3
2016. 1~6월	62,021.1	13,380.7	8,025.8	5,354.9	3,045.0	2,309.9	48,640.4	4,806.5	43,833.9	27,758.7	16,075.2
2017. 1~6월	68,454.8	14,996.5	9,180.9	5,815.6	3,035.1	2,780.5	53,458.3	9,339.7	44,118.6	27,504.3	16,614.3
증감률	10.4	12.1	14.4	8.6	-0.3	20.4	9.9	94.3	0.6	-0.9	3.4

자료: 통계청(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가 포함된 금액임).

■ 민간 수주, 모든 공종에서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8.6% 감소

- 2017년 6월 민간 수주는 모든 공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8.6% 감소, 3년래 최저치인 8조 3,460억원을 기록함.
 - 토목 수주는 기계설치와 발전설비 수주가 부진해 6월 실적으로는 최근 4년 간 가장 낮은 3,34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65.7% 감소함.
 - 주택 수주의 경우 재개발 수주가 양호했으나 신규 주택 수주가 부진해 6월 실적으로 3년 내 가장 낮은 5조 2,656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4.3% 감소함.
 - 비주택 건축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건축공종 수주 부진한 반면, 토목은 대부분 양호

- 건축 공종의 경우 공장 및 창고 수주를 제외하고 모두 부진했음(<표 2> 참조).
 - 공장 및 창고 수주는 반도체 공장 수주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4% 증가, 6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조 2,409억원을 기록하였음.
 - 주택의 경우, 공공은 양호했으나 민간이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하였음.
 - 사무실 및 점포와 관공서, 기타 수주도 각각 15.0%, 65.0%, 1.0% 감소해 부진했음.
- 토목 공종의 경우 기계설치와 발전 및 송전 수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했음.
 - 기계설치와 발전 및 송전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8.9%, 64.2%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1조 1,834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41.6% 급등함. 이는 6월 실적 기준으로 최근 8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임.
 - 철도 및 궤도 수주와 토지조성 수주도 각각 83.1%, 1.1%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한편, 상하수도 수주는 민자사업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2% 증가함.

<표 2>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토지조성	상하수도	기계설치	발전 및 송전	
2017. 6월	5,887.4	1,481.5	1,240.9	367.7	217.6	1,183.4	625.8	398.9	226.0	270.0	77.1	
증감률	-9.5	-15.0	90.4	-65.0	-1.0	141.6	83.1	1.1	101.2	-28.9	-64.2	
2017. 1~6월	30,539.4	9,128.4	5,885.7	3,678.9	701.8	4,880.1	1,185.5	1,462.0	736.2	3,219.8	4,625.8	
증감률	-0.9	-6.0	19.3	20.3	3.0	45.1	37.7	-21.4	18.5	22.4	363.0	

자료: 통계청.

박철한(부연구위원.igata99@cerik.re.kr)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 I 1)

-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전략, 스마트 기술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해야 -

■ 선진국은 최근 인프라 신설 및 재투자에 전력

- 최근 선진국은 인프라의 신설 및 재투자를 위한 각종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 활성화,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인식에 기반함.
- 선진국은 장기간의 투자로 구축된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응하고, 신설 인프라를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데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압축 성장 시기에 지어진 인프라의 안전과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예방적 투자가 필요

■ 선진국은 장기 계획 수립 하에 인프라의 질적 수준 향상에 집중

- 주요 선진국의 인프라 정책 추진 동향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SOC 예산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교통부문, 특히 도로와 철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C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도 2013년 이후 SOC 예산이 증가함. 호주도 최근 6년 간 SOC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3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둘째, 선진국은 장기 계획 수립 하에 인프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2015년 국가 교통 예산법인 「육상교통정비법(FAST :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제정을 통해 이후 5년(2016~20년) 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영국은 2016년에 NIDP(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라는 이름으로 2020~21년까지 인프라 개발을 위해 6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4,83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독일도 2030년까지 교통부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FTIP(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를 수립함. FTIP 2030에서는 2,696억 유로의 자금 투자 계획을 발표함.

1) 본고는 우리 연구원이 발간한 최석인·박수진·최수영·최은정·박희대·박철한(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인프라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 연구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622~624호(3회)에 걸쳐 연재 예정임.

- 호주는 'Infrastructure Australia Act 2008' 을 발표해 향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인프라의 자동화와 첨단화, 그리고 인프라의 재건과 투자를 위한 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일본은 2012년 제3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SOC 정책과 관련해 총 9개 과제 18개 시책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 셋째, 선진국의 장기 투자 계획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살펴보면, 기존의 노후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즉, 오래된 기존의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인프라 재건 시 친환경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첨단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국내 건설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추진 필요

- 선진국의 인프라 정책 추진 동향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특히, 최근 5년 동안 SOC 예산은 타 부문에 비해 소외를 받고 있어 선진국의 추세와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예산의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재투자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5년 단위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 즉 향후의 트렌드 변화에 맞춘 기술력 도입, 인구 통계학적 변화, 정치적 변화 등의 상황을 고려한 인프라의 분야별 투자 전략이 포함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 계획만 세우고 있는 상황임.
- 이와 함께 다양한 정책 기조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중장기 인프라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질적 제고 방안, 즉 스마트 인프라의 도입 계획은 미흡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프라 투자 기조는 양적 중심에서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 우리 건설은 미래형 인프라, 즉 '스마트 인프라'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며, 완성 시설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의 스마트화를 이루어야 함.
-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용성,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최은정(부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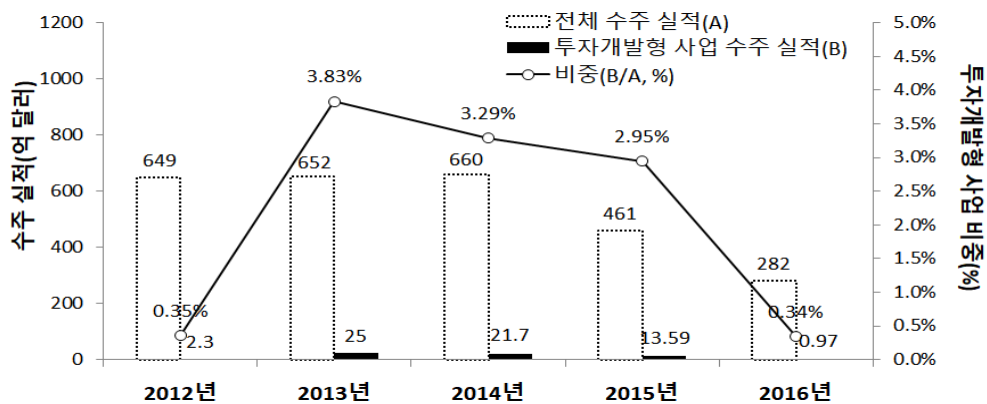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의 수주 역량 강화 방안

- 재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도 부각되어야 -

■ 해외 건설시장의 지속 성장과 발주 국가의 자원 상황 악화, 투자개발형 시장 부각

- 해외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이에 건설기업들의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음.
 - 시장 환경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¹⁾
 - 반면, 우리 건설기업의 주력 시장인 중동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발주 요구 사항 및 지원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나아가 유가 및 정치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가별 자원 부족에 의한 발주 물량 감소와 계약자의 금융조달 능력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올 6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15회 건설정책포럼’에서도 향후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수주 및 수행 역량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상호 협력적인 준비가 주요 이슈로 강조되었음.
 - <그림 1>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비중이 2.3%에 불과한데, 2015년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시장 규모가 약 4,2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약 0.15%로 매우 낮은 수준임.²⁾

<그림 1> 국내 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수주 실적 규모 및 비중



자료 : 해외건설협회

1) IHS Markit(2017), "IHS Global Insight".

2)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확대, 정부의 지원 서비스와 건설기업 역량 확보가 절실

-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해외사업에 대한 수주 정보 제공, 기획 및 사업 모델 개발 지원, 금융 자문 등 건설기업의 재원 조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3년 정부의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설립된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는 해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정보 제공과 금융주선형 및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선제적 역량 확보와 금융 지원 정책에 의한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업 경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함.
- 투자개발형 사업은 발주 국가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획제안형 사업의 발굴 및 재원 조달 역량 확보가 절대적임. 이러한 역량 확보를 통해 사업 발주를 유도하고 침체된 해외사업 수주 확대가 가능할 것임.
 - 최근 프랑스 Vinci사, 스웨덴 Skanska사, 미국의 Bechtel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하여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을 높이고 있음.
 - 특히, Vinci의 경우 영업이익의 78%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운영 사업에서 발생하고, Skanska는 M&A를 통한 금융 역량 강화로 투자개발형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

■ 재무 설계 전문가와 함께 건설 기술 전문 인력도 양성되어야

-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필수적인 뉴노멀 시대에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도 필수적임. 또한 정책의 현실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기업 경영 구조의 재구성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글로벌 선진 기업과 같이 주력 사업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시장 환경에 따라 신속히 개선하여 재원 조달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시켜야 함.
- 나아가 건설기업은 재무 설계 전문가(financial advisor)와 건설 기술 전문가(engineer advisor)의 균형 있는 양성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행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사업 발굴과 기획 단계에 요구되는 기술 전문가는, 프로젝트 리스크 등의 분석을 통해 발주자와 투자자를 설득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선결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건설 단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수익성 악화의 위험도 막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기회와 방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청년 없는 건설업, 기반이 흔들린다

이십여 년 이상 건설업 분야에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의 하나가 건설업만큼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도 드물다는 것이다.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획, 설계 등 엔지니어링은 모두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며, 시공조차도 일부 토목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자와 기능인력의 손길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건설업을 흔히 'People Business'라고 부른다. 그만큼 건설업에서 '사람(인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십수년간 우리나라 건설업에서는 사람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지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일거리만 있으면 일할 사람은 넘쳐났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건설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통계상으로는 너무 많아 과잉을 걱정할 지경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기술자는 무려 77만 4,477명으로 2011년에 비해 16.9%나 증가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금년 4월에 건설 시공과 엔지니어링 업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 내 건설인력의 과부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다'를 걱정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대부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통계와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통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술인력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하의 청년층 인력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전체 기술인력의 9.2%를 차지했던

30세 이하 청년층이 2016년에 와서는 3.9%로 하락하였다. 비중만이 아니다. 인원 수 자체도 6만 939명(2011)이던 것이 3만 363명(2016.10)으로 50.2%나 감소한 것이다. 비단 30대만이 아니다. 31~40세 이하의 기술인력도 그 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인구가 노령화되니 건설인력도 노령화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의 비중은 15.2%로 건설업의 3.9%에 비해 11.3%p나 높다. 더욱이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우리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된 일본의 경우 건설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10.8%(2015년 기준)로 우리의 3.9%보다 6.9%p나 높다.

청년인력의 진입이 중단된 산업에서 비전을 논하기는 어렵다. 현장 기술의 계승이 필수적인 건설산업은 더욱 그러하다. 답답한 것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일찍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 6월 기술검정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기사보 자격을 신설하며, 청년층 기술인력을 위한 Career Step을 가시화하는 등 청년층 인력의 건설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이제 우리도 말잔치에서 끝나지 않는 실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간 건설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매일건설신문 2017. 8. 11〉

김민형(선임연구위원 · mhkim@cerik.re.kr)